

얼어붙은 광주 고용시장...지원책으로 숨통 틱운다

경충, 고용안착 활성화 참여자 모집...신규자 최대 400만원 상의, 장기근속 근로자 장려금 숙련 인력 역외 유출 방지 중점

광주지역 주력 산업 위기로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지역 경제단체들이 채용과 장기근속을 아우르는 지원책을 동시에 가동하며 대응에 나섰다.

29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는 지역 융·복합 가전산업 및 전후방 연관 기업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고용 안착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자를 집중 모집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주력 애플리케이션 개발

2·3차 협력업체들이 겪는 생산 차질과 인력 공백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긴급 대응 성격의 지원책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 가전 및 연관 제조기업과 만 15세부터 59세까지 구직자다. 공공 고용망 연계로 시작으로 채용, 현장 적응, 장기 근속까지 단계별 지원을 이어가는 구조로 설계됐다.

핵심은 신규 채용 부담을 낮추는 직접 지원이다.

'든든 버팀 안착 지원'을 통해 신규 입사자 1인당 최대 400만원이 투입되며, 이 중 300만원은 기업에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인건비로 지원된다. 근로자에게는 6개월 근속 시 100만원의 축하금이 지급되며 기업과 구직자 모두의 초기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 기술 단절을 막기 위한 내부 인력 육성도 병행된다. '현장 이음 상생 지원'은 숙련 재직자와 신규 입사자를 1대1 매칭하는 멘토링 방식으로 운영되며 신규 인력이 6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사수 역할을 맡은 재직자에게 6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이는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와 조직 내 협업 문화를 동시에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채용 초기 이탈을 막기 위한 장치도 충분히 갖췄다.

구직자가 면접에 참여하면 5만원의 면접비를 지원하고, 입사 후 1개월 만기 시 50만원의 취업 축하금을 지급한다. 기업에는 신규 인력 적응을 돕는 소통 간담회 비용을 1인당 5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 조직 융화를 유도한다.

사업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대내외 악재로 신규 채용을 미루는 기업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이 기업의 채용 부담을 덜고 구직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얼어붙은 지역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만드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한상원)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인 광주 광산구를 중심으로 '고용이음 장기근속 장려금' 신청을 30일부터 시작한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광주시 지원으로 추진되는 '광주 고용이음 위기극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가전·고무 산업 숙련 인력의 역외 유출을 막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해당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만 15세부터 59세까지 근로자로, 요

건을 충족하면 1인당 최대 20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특히 임금체불 근로자와 생활임금 기준 110% 이하 청년, 130% 이하 중장년을 우선 지원해 생계 안정과 고용 유지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다음달 15일까지 광주상의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심사를 거쳐 근속 여부 확인 후 순차 지급된다.

이와 함께 광주상의는 이·전직 근로자와 비자발적 퇴사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비자발적 퇴사자 50만원)의 '고용이음 안착 지원금'도 병행 운영한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는 최근 어반브룩 어반리움에서 '광주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정기회의를 열고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안전 곧 경쟁력'...민관 합동 산업재해 감축 본격화

안실단 정기회의...도시철도 2호선 등 현장 맞춤형 관리 추진

광주지역 산업현장의 안전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는 최근 어반브룩 어반리움에서 '광주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정기회의를 열고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안실단은 지난 2023년 20개 기관이 참여해 출범한 민관합동 기구로, 올해는 30개 기관으로 재편돼 운영 3년 차를 맞았다. 지역 산업현장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협력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첫 회의로,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공동 목표를 공유하고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참석자들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지는 데 뜻을 모았다.

올해 안실단은 노·사·민·정이 함께 참여하는 범사회적 안전문화 실천 운동을 추진한다.

우선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3대 기초 안전수칙과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한다. 현장 계고장과 위험표지판을 배포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또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를 대표 메시지로 내세워 연중 안전의식 확산 캠페인을 전개한다. 일상 속 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현장 중심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대·중견기업과 공공기관의 교육·홍보 인프라를 중소기업장과 공유하는 '안전문화 공유' 활동을 통해 현장 안전 역량을 끌어올린다.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합동 점검과 멘토링,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신설된 '안전한 일터 지

킴이'를 활용해 기술·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지역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정밀 점검과 안전포럼 등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제도 개선에 따른 현장 안착도 주요 과제다.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위험성 평가 제도를 개선 사항을 산업단지와의 자체 홍보 채널을 통해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근로자 대표 참여 보장과 미이행 사업주 제재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이동영 광주노동청장은 "지역 일터에서 단 한 명의 노동자도 생명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전문화 확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동원 안전보건공단 광주본부장은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과 캠페인을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3.1% 달성

노동부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발표

우리나라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된 지 34년만에 처음으로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정부 의무기준인 3.1%를 넘어섰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보면 작년 말 기준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1%로 2024년 말(3.03%)보다 0.07%p 올랐다.

정부가 제시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3.1%를 처음 달성한 것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시행된 1991년 이후 34년 만이다.

지난해 민간과 공공부문 전체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30만9846명으로 전년 말보다 1만1192명 늘었는데, 이 중 민간기업 인원이 9507명을 차지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 중 10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3.06%로 전년 대비 0.09%p 상승했다.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3.94%로 2024년 말보다 0.04%

p 높아졌다.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8%다.

다만, 공공부문 중에서도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이 2.85%, 민간기업 중에서는 100인 미만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2.1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체 장애인 노동자 중 중증 장애인 비중은 37.5%, 여성 장애인 비중은 29.3%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 노동자 가운데 지적, 자폐, 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23.1%를 차지해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을 통틀어 지난해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3.27%로 1년 새 0.06%p 올랐다.

연합뉴스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통합특별시 정책 제안

각 정당 후보자에 순차 전달...기업유입 등 47건 제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계가 차기 시정에 반영할 정책과제 제시에 나섰다.

기업 유입과 산업 경쟁력 강화, 인프라 개선 등 지역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요구를 담아 통합 이후 성장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9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를 시작으로 각 정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지방선거 정책과제 전달식'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번 전달식은 광주와 전남 통합이라는

구조적 전환기를 맞아 지역 경제의 핵심 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차기 시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중앙회는 사전 의견 수렴을 통해 총 47건의 정책 과제를 도출했다. 분야별로는 기업 및 인재 유입 촉진 8건, 산업 및 기업 혁신역량 제고 15건, 기업 연계 인프라 개선 12건, 지역 특화 과제 12건 등이다.

과제에는 투자 유치와 관련 제도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 물류·교통 등 기반시설 확충, 지역 맞춤형 산업 육성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의 체질 개선을 염두에 둔 구성이다.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는 이번 전달식을 시작으로 각 정당 후보자들과의 릴레이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견 개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임경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회장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통합특별시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과 소상공인이 지속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안정망, 현장의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실천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 실현을 최우선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DH Group



www.global-dh.com

